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찰리 로즈’ 쇼, 인턴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찰리 로즈와 그의 제작사는 한 전직 무급인턴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집단소송에서 25만 달러(한화 약 2억 6,8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로즈 씨와 제작사(찰리 로즈 社)는 189명의 인턴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줄 것이다. 합의안은 인턴들에게 약 1,100달러(한화 약 118만 원)씩을 찾아가라고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당 110달러 최대 10주 - 이는 대략 한 학기이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인 루시 비커튼 씨는 ‘찰리 로즈’ 쇼에서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25시간씩 일하면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미국공영방송망에서 방영되고 있는 찰리 로즈 쇼에서 비커튼 씨가 맡았던 일은, 로즈 씨가 참고하도록 게스트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취합하며,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안내하고, 대기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인터뷰에서 비커튼 씨는 이 합의가 “무급인턴 반대 운동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이는 무급인턴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했던 일련의 소송들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합의였다. 그 밖에 소송들로는 허스트 사에 대한 소송과 폭스 사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는 인턴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마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무급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일부 인턴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많은 고용주들이 무급인턴들에게 정규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시키고 있고, 사실상 아무런 직업훈련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서에는 로즈 씨와 그의 제작사가 “어떤 책임이나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소송비용을 줄이고 소송을 끝내기 위해서”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에는 로즈 씨와 제작사 명의로 작성되었고 “우리 인턴들은 종업원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인턴프로그램에서 보수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다.

비커튼 씨의 변호사 레이첼 비엔 씨는 “우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이곳을 거쳤던 인턴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합의서에는 비커튼 씨의 변호사들에게 지급할 5만 달러(한화 약 5,370만 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합의내용은 로즈 쇼에서 2006년 3월 14일부터 2012년 10월 1일 사이에 일했던 인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합의서의 혜택을 받으려면 인턴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당 110달러(한화 약 12만 원)의 합의액은 인턴들의 평균 근무시수인 6시간과 평균 근무일수인 2.5일에 기초한 것이다.

비커튼 씨의 소송은 뉴욕 법원에서 다뤄졌는데,

뉴욕주법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최대 6년까지 소급하고 있다. 반면 연방법에서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급인턴은 영화사, 잡지사, 패션산업, 출판사와 같은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인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보수방침을 변경하였다. 예컨대, 폭스 사는 2010년 7월부터 인턴들에게 보수를 주고 있으며, 콘드나스트 잡지사는 학기당 550달러(한화 약 60만 원)를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년 12월 20일자, ‘‘Charlie Rose’ Show Agrees to Pay Up to \$250,000 to Settle Intems’ Lawsuit’

유럽

독일 : 2012년 12월 및 2012년 노동통계 발표

독일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이하 'BA')이 발표한 2012년 12월의 월간 노동시장 동향 및 2012년 1년간의 노동관련 통계에 따르면 다소 악화된 12월의 노동지표에도 불구하고 연간 노동시장의 상황은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연방노동청(BA)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의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12월 현재 독일의 실업인구는 약 284만 명으로 약 8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실업률은 전월대비 약 0.2%포인트 증가한 약 6.7%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12월 대비 약 6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2013년의 불안한 경기전망과 맞물려 고용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방노동청(BA)의 이사장인 Frank-J. Weise는 유럽의 부채위기의 여파로 인한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연말에서야 다소 악화된 지표를 나타내며 견고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이유는 불완전고용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있다. 2012년 12월 노동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불완전고용 인구는 약 381만 3천 명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약 7만 8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 고용을 위한 노동정책적 프로그램

의 참여 인구 감소와 창업 지원 규모의 감소 추세에 비추어 불완전고용 상태의 근로자들이 완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규직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인 직업교육 과정과 미니잡(Mini Job)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름 휴가철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25세 미만의 실업률 분포는 2012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2월의 실업률 증가는 구 동독지역이 구 서독지역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약 4.2% 수준의 실업률 격차를 보였던 두 지역은, 12월 들어 약 4.5%로 증가하였다. 특히 구 동독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다시 10% 이상으로 증가하며 2013년의 노동시장 전망을 다소 어둡게 만들고 있다. 다만 연간 평균실업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2005년 약 8.8%였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약 4.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확대된 실업급여는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한 실업규모를 모두 포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실업급여의 신청자 수는 약 92



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약 11만 1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수급자는 약 87만 5천 명으로 약 9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의 악화된 노동지표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연평균 실업률은 지난 2005년 약 11.7%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대비 약 0.3%포인트 감소한 약 6.8%를 기록하였다. 전체 취업인구 역시 4,150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45만 명이 증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기업 및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3년 유럽의 경기전망은 2012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 역시 신규고용 규모를 2012년보다 축소하여 발표하고 있다.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고용 시장을 유지하며 부채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을

가장 앞장서 이끌어 왔던 독일이 2012년과 같은 안정세를 2013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1)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2013년 1월 3일자, 'Der Arbeitsmarkt im Dezember: Robuste Arbeitsmarktentwicklung auch am Jahresende'
- 2)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2013년 1월 3일자, 'Der Arbeitsmarkt im Jahr 2012: Robuster Arbeitsmarkt in einem schwierigen wirtschaftlichen Umfeld'

독일 : IMK-지표상 경기후퇴 위험 감소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주변국가로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금융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독일의 경기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다소 악화된 실업률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 산하 거시경제 및 경기연구소(Institut für Makroökonomie und Konjunkturforschung: IMK)는 2013년 3월

까지의 경기지표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K의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경제지표는 불황지수가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지난 12월과 2013년 1월에 걸쳐 2회 연속으로 불황지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경기후퇴위험지수는 30% 이하로 떨어져 경제지표 신호등(Ampel-System)에서 녹색구간으로 예측되었다.

IMK의 전문가인 자비네 슈테판(Sabine Stephan) 박사에 따르면 1월 현재 실물경제에 근거한 경기예

측 자료를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동향 및 산업생산 현황과 같은 현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경기침체 위험 정도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기침체 척도를 위해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1월 현재 경기침체 위험 정도는 36.2%에서 12.5%로 감소하였으며, 이어지는 2월의 경기침체 위험 역시 17.8%에서 10.3%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3월에도 이어져 8.1%까지 경기침체 위험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특히 자본재 및 중간재의 주문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경기 예측에 사용된 이러한 지표 결과들은 이포(Ifo) 경제연구소의 지표에도 반영되어 지난 두 달간의 영업 기대치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

과 정부의 차입금도 상호 간 확산추세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의 전반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경제도 2012년 2사분기 이후 악화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3년 1사분기에는 2012년 후반기의 안정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급격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1)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 2013년 1월 15일자 언론보도용 자료, 'IMK-Indikator: Rezessionsrisiko erneut gesunken'
- 2)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 'IMK Konjunkturindikator'

스웨덴 : 2013년 및 2014년 노동시장 전망

2012년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세계 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발전을 보여 2012년을 통틀어 전체 고용인구가 약 7,000명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말부터 시작해 노동시장은 본격적인 하향세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에 국민 총생산액은 1%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 고용인구는 약 4만 명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실업률이 2012년의 7.8%에서 2013년에는 8.4%, 그리고 2014년에는 8.5%로 올라갈 것을 의

미한다. 고용인구의 감소가 큰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의 실업자 그리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신, 교육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는 현재 실업자들이 취직하는 데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해 구직을 하고 있는



스웨덴 인구의 수는 평균 39만 3,000명으로 2013년에는 평균 43만 5,000명, 그리고 2014년에는 평균 44만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기하락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2010년부터 시작해 스웨덴 정부가 모든 이민자들로 하여금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도록 이민자 정책을 개편한 이후, 약 8만 명의 이민자가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해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고용센터가 12,00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주를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의 고용전망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민간기업들은 2013년 경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신규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신규채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의 공공사업이 민간부문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 출처: 국영고용센터 AMS, 2012년 12월 29일자, 'Arbetsförmedlingens prognos för åren 2013 och 2014 - Sysselsättningen viker nedåt'

영국 : 정리해고 협의기간 90일에서 45일로 축소

영국 정부가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기 전 시행되어야 하는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기간(consultation period)을 90일에서 45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도달하는 경우 정리해고 협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20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동안, 10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90일 동안 근로자들의 대표권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지난 여름에 거듭 논의한 결과,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기간 90일을 단축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기간을 45일로 줄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들에게 협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고용법 개정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관계부 조 스윈슨 장관(자유민주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시급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개혁은 ① 근로자들이 그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과 ② 사용자들이 기업 개혁에 필요한 확실성과 유연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2013년 4월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영국노총(TUC)은 “이러한 변화로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며 “협의를 줄이는 것은 노조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자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협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안정한 근로자 그룹의 일자리 및 재정적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임시직 근로자들의 배치전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브렌든 바버 TUC 사무총장은 “정부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

다”며 “현재 실업률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높지 않은 이유가 노사가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확실한 신호로 보고 이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팀 토마스 제조업사용자연합고용 및 기술분야 대표는 “이는 협의의 ‘기간’이 아닌 ‘질’에 초점을 둔 협의시스템의 현대적 변화”라고 말했다. 닐 카버리, 영국산업연맹(CBI) 고용 및 기술 책임자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의미 있는 협의”라며 “협의를 줄이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미래에 좀더 빨리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 2012년 12월 18일자, ‘Redundancy consultation period to be halved to 45 days’

영국 : 육아수당 개정안 발효

2013년부터 육아수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 수입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5만 파운드(한화 약 8,5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육아수당이 일부 삭감되며, 6만 파운드(한화 약 1억 260만원)인 경우 육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영국 정부는 육아수당 개정의 실시로 정부 지출이 연간 약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6,115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

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아수당 개정에 대하여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전 국민의 약 15%로 추산되는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가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돌아갈 육아수당을 다른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도모하는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 야당(노동당) 재무장관인 에드워드 볼스는 정부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에 중점



을 두어야만 하며, 이번 육아수당 개정과 같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 개편은 큰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육아수당 개정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관한 개편안 중 가장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 외에도 현재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국가수당 상승률 제한에 관한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14년부터 향후 3년동안 구직수당, 육아휴직 수당 및 세금공제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작년부터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자신신고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 중 19만 1,873명이 이미 자신신고를 통해 육아수당 제외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상자들은 자신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신신고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신고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 각각 연간 49,000파운드를 버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육아수당이 유지됨에 반하여, 부모 중 한 명만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51,000파운드를 버는 경우에는 육아수당이 감소하는 이번 개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대변인은 가구소득을 근거로 한 육아수당 중지는 육아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8백만 가구 전부에 대한 수입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방식이 대다수의 가구에 부합하는 간단한 방식이라고 전했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부모 중 한 명만이 일하는 육아수당 제외 대상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육아수당은 첫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20.3파운드(한화 약 35,000원), 둘째 자녀부터는 13.4파운드(한화 약 23,000원)가 지급되며, 육아수당은 16세, 자녀가 전일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8세, 그리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육아수당 개정으로 인하여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평균 육아수당 감소는 약 1,300파운드(한화 약 22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BBC뉴스 인터넷판, 2013년 1월 7일자, 'Child benefit changes take effect'

영국 : 유럽 자동차산업 위기 - 혼다 영국 스윈돈 공장, 800명 해고

혼다가 영국 스윈돈(Swindon)에 위치한 공장에서 8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친 수요약세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업체인 혼다는 스윈돈에서 1992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해 왔는데, 최근 유로존 경제위기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

Civic, Jazz, CR-V models를 생산하는 스윈돈 공장에는 3,5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지난해만 해도 500명을 추가 고용할 정도로 성장세를 예견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최근 혼다는 정리하고 시행 전 거쳐야 하는 90일간의 노사협의를 들어갔다.

혼다는 성명에서 계속되는 유럽시장에서의 수요 침체는 혼다의 기업 경영구조를 재편성하게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에서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에 100만 대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혼다 스윈돈 공장의 생산능력은 25만 대인데, 2012년에는 16만 6천 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9만 7천 대를 생산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매우 증가한 것이지만 23만 대를 생산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는 성명을 내고 혼다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유럽에서의 수요 축소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영국 자동차산업 전망은 밝다고 주장했다. 1월 둘째 주에 나온 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내 연간 신규 등록 차량대수는 2012년에 5.3% 증가해 204만 4,609대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 통계는 지난해 영국에서 새로 등록된 혼다 차량은 2011년보다 7.2% 증가한 5만 4,208대였음을 보여줬다. 스윈돈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의 40%가량이 영국 내에서 팔렸다. 때문에 산업경제부 장관 빈스 케이블은 지난 2012년 9월 혼다를 방문하여, 영국에서 2억 6,700만 파운드(한화 약 4,645억 원)를 투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혼다의 사례는 영국이 제조를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차량 등록에 관한 최신 수치는 영국자동차협회 수치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2012년 들어 11월까지 혼다 자동

차 13만 1,346대가 유럽에서 신규 등록되었는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한 것이다. 푸조 시트로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푸조 시트로엥의 세계 판매량은 2012년에 급격히 떨어졌는데, 경제위기가 유럽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판매량은 불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부유럽 국가들에서 특히나 낮았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그리스에서는 2012년 11월까지의 자동차 신규 등록비율이 41% 줄었고, 포르투갈(37%)과 이탈리아(20%)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BMW는 반대로, 브랜드 인기가 도전적인 시장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12년 연간 판매량은 유럽 전역에서 1% 증가했다.

BBC가 내놓은 분석기사에 따르면, 영국 스윈돈 공장에서 8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한 혼다의 결정은 유럽의 암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완성차 공장의 가장 최근의 반응이다. 유럽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 20년 동안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에 3% 이상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판매량 급감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이미 공장 폐쇄나 수만 개의 일자리 감축을 선언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팔리지 않은 400만대의 재고차량을 감안하면 혼다가 유럽에서 자동차 제조를 축소하는 마지막 자동차회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출처: BBC 인터넷판, 2013년 1월 11일자, 'Honda to cut 800 jobs in Swindon'



프랑스 : 올랑드 정권, 실업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2013년 고용문제는 현 정부에 있어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우리의 모든 역량은 단 하나의 목표, 현재의 실업률 곡선을 하강시키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올랑드 대통령이 역설한 내용이다.

하지만 12개월 내에 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프랑스 통계청 INSEE는 2013년 전반기 성장률을 0.1%로 내다봤다. 구직자의 수를 줄이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치이다. 연 성장률이 약 1.5%로 늘어날 경우 실업률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또한 올해 전반기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에 시장 부문에서 약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프랑스 본토 실업률이 10.5%까지 상승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중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원조 계약(정부 보조 계약)이다. 미셸 사팡(Michel Sapin)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초 여름 8만 개, 그리고 10월 4만 개의 원조 계약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이러한 형태로 체결된 노동계약은 비시장 부문에서만 약 44만 개에 이른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일

자리(저소득, 저교육층의 교외 지역 젊은이들을 정부가 육성 중인 부문에 우선 취업시키는 정책)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2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혜자가 되었고, 올해부터 2004년 말까지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대계약 역시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는 이 형태의 노동계약을 통해 매해 10만 명씩 향후 5년간 총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은 체결될 계약의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할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는 1월 10일에 다시 열리게 되는 노사간 협상(지난 연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간 고용안정화 협상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오는 1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두려움을,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출처: Le Monde, 2013년 1월 1일자, 'Faire baisser le chômage avant fin 2013? Une promesse très difficile à tenir'

프랑스 : 자동차 회사 르노, 2016년까지 7,500명 인력 감축안 발표

지난 1월 15일,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Renault)는 오는 2016년까지 7,500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고용 보호에 관한 노사협상의 동의서가 만들어진 지 4일 만에 발표된 이 계획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직원 15%에 달하는 인력 감축안을 발표한 르노는 국가 지분이 15%를 차지하는 공기업에 가까운 자동차 회사이다. 산업재건부(redressement productif) 몽트부르크(Montebourg)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네 가지 측면에서 여타의 정리해고 계획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첫째, 어떤 해고도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공장폐쇄 계획도 없으며, 셋째,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닛산(Nissan)이나 다임러(Daimler)의 생산라인을 프랑스 공장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일자리 감축안은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신규채용으로 충당하지 않는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영국의 닛산 생산라인을 프랑스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1999년 닛산이 어

려움에 처했을 때, 르노와의 동맹을 성사시켰듯이,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르노가 닛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6년까지 예상되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수는 5,700여 명이며, 나머지 1,800여 명은 조기퇴직 혹은 기업 내외 인사이동에 따른 퇴직 대상자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GPEC* 협약 대상자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GPEC 차원의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인력 축소 규모가 7,500여 명이 아니라 8,260명에 달할 것이라는 한 일간지의 보도가 있어,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 출처: 1) Le Monde, 2013년 1월 16일자, ‘Renault: une annonce gênante pour l'Élysée’
- 2) Le Monde, 2013년 1월 16일자, ‘Comment Renault utilise la GPEC pour éviter le plan social’
- 3) Parisien, 2013년 1월 17일자, ‘Renault: les vrais chiffres du plan de départs’

* Gestion Prévisionnelle de l'Emploi et des Compétences (고용과 직업능력에 대한 예측 경영): 사회 경제 및 기술, 그리고 인구 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사회통합법(la loi de cohésion sociale)’에 의해, 300인 이상의 기업은 3년마다 이에 대한 노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

일본 : 2012년 희망·조기퇴직 약 16,000명,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2012년 1월 이후 상장기업이 모집한 희망 및 조기퇴직자 수가 16,779명에 달한 것으로 도쿄상공리서치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희망 및 조기퇴직자 수가 15,000명을 넘은 것은 리먼쇼크의 영향으로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던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업적이 좋지 않은 대형전기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용환경의 악화가 뚜렷해졌다.

조사는 1월부터 11월 7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기업들의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 모집인원의 합계는 이미 전년(8,623명)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희망 및 조기퇴직을 실시한 기업 수는 57개 사로 기업 수에서도 전년(58개 사)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 중에서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르네상스일렉트로닉(그룹사 포함 5,000명, 응모는 7,446명)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NEC(2,393명), 샤프(2,000명)의 순이었다.

실시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기가 17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매업이 6개 사, 전기 및 금속제품, 정밀기기, 정보·통신이 4개 사로 나타났다. 모집 및 응모인원이 100명을 넘은 기업은 23개 사에 달하였다.

• 출처: 닛케이산업신문, 2012년 11월 13일자, '希望・早期退職1万6000人、今年の募集分、09年来の高水準、電機など雇用悪化'

일본 : 실업자 고용 1년간 연장, 후생노동성 기금 추가 지원

후생노동성은 고용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고용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기금을 통해 개호(노인장기요양)와 관광, 농업 등 성장분야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NPO와 민간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실업자와 미취업 줄

업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성장분야에서의 취업경험을 또 다른 취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이다.

연장이 결정된 분야는 「중점분야 고용창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결

정으로 기금에 800억 엔(한화 약 9,718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2013년 말(2014년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NPO와 민간기업은 도도부현의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 중 절반을 인건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고용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역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의 감속 등으로 일본 국내의 고용환경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 2012년 10월의 유효구인

배율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말에 걸쳐 대기업 전기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고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전자판뉴스, 2012년 12월 14일자, ‘失業者雇用を1年間延長 厚労省、基金積み増し’

일본 : NTT 그룹, 40대부터 임금상승 억제, 65세 고용연장제도에 대응

NTT 그룹 노사가 2013년 4월부터 65세로의 고용 연장제도의 이행을 위해, 현역세대의 인건비를 줄이는 임금제도를 2013년 가을에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지난 2012년 12월 15일 밝혀졌다. 임금상승을 40대부터 억제하여 60~65세의 임금 자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NTT 그룹이 이러한 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고령자계속고용의 주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시행에 의해 2013년 4월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의 고용연장이 의무화되게 되는데, NTT의 이번 조치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직 2만 명을 제외한 NTT 그룹의 주요 8개 사

와 관련회사 조합원 약 18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며, 2013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한 임금 체계로 이행하여, 2014년 4월부터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이 실시될 계획이다.

연령에 따라 인상하는 기준 내 임금의 상승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반면, 개인 업적에 따른 성과수당의 임금부분을 늘릴 방침으로 성과가 좋은 사원의 연간수입은 현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NTT 그룹 이외에도 65세까지의 계속 고용에 대응하여 고용제도를 재검토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 산토리홀딩스(HD)는 2013년 4월부터 ‘65세 정년제’를 도입하는데, 급여수준은 현행 재고용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60세 정년 시점의 60~7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다이와 하우스공업도 65세로 정년연령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년층 근로자의 취로의욕에 부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인건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토요타자동차는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하는 「하프타임근무」를 공장의 생산부문에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단련은 2013년도 춘투의 경영 측 지침에서 급여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역세대의 임금억제

를 주장할 방침이다. 일본기업은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 할 수 있다.

- 출처: 산케이신문 도쿄 조간 5페이지, 2012년 12월 16일자, 'NTT, 40代から賃上げ抑制 65歳雇用延長制度に対応'

일본 : 노동조합 조직률 17.9%로 사상 최저치

일본후생노동성이 2012년 12월 18일 발표한 「2012년 노동조합기초조사」에 의하면, 2012년 6월 말 현재 일본 노동조합 조직률은 17.9%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조합원 수는 989만 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 8,000명이 감소하여, 전체 고용근로자 5,528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9%였다. 노조 수도 2만 5,775개로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277개 조합이 감소하였다.

조합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27.4%로 가장 많고, 이어 소도매업 12.3%, 공무원 9.4%, 운수업/우편업 8.9%, 건설업 8.4%, 그리고 금융업/보험업 7.5% 등의 순이었다. 2011년에 비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공무원으로 2만 4,000명, 이어 제조업 2만 명, 건설업 1만 7,000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조합원이 증가한 산업도 있었다. 소도매업이 2만 1,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어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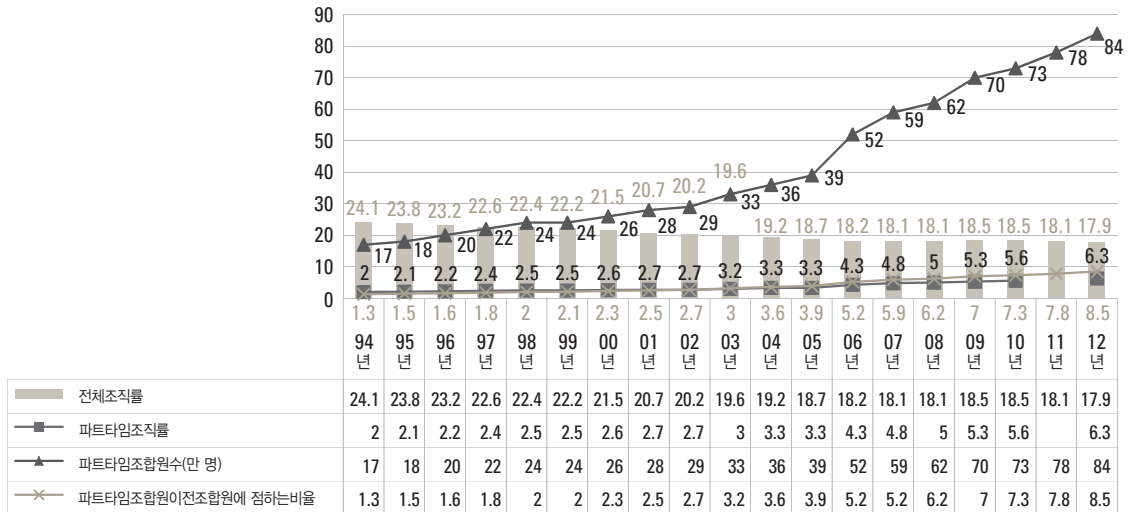
4,000명이었는데, 증가한 조합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조합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매년 증가하여 2012년은 30.4%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하였으며 노조원의 여성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조직률을 산업별로 보면, 복합서비스업이 5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50.5%, 금융업/보험업 48.0%, 공무원 39.5%, 제조업 27.3%, 운수업/우편업 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기업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1,000인 이상 45.8%, 100~999인 13.3%, 99인 이하 1.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았다.

전체 노조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트타임 조합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참조). 2012년 약 84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1,332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 또한, 파트타임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지

[그림] 노동조합 조직률과 파트타임 조합원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2012년 노동조합기초조사」.

난해 7.8%에 비해 0.7%나 증가하였다.

전국조직별로 보면, 최대 전국조직인 렌고의 조합원은 683만 9,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1%이고, 전노련은 83만 7,000명으로 전체의 8.5%, 전노협은 12만 5,00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 비해 조합원 수의 변동을 보면, 렌고가 1,000명 감소한 데 비해, 전노련은 2만 3,000명, 전노협은 3,000명이 감소해 전노

련과 전노협의 전국조직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조합원의 상황을 통해, 최근 일본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하에 조합원의 여성화, 파트타임 조합원의 증가, 렌고의 상대적 지위 상승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2년 12월 18일자, ‘平成24年労働組合基礎調査の概況’

중국 : 사회과학원 『2013년 사회청서 : 2013년 중국 사회형세 분석과 예측』 발표

2012년 12월 18일 오전 중국 사회과학원이 베이징에서 『2013년 사회청서 : 2013년 중국 사회형세

분석과 예측』을 발표했다. 사회청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취업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성장의 속도 감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농민공과 대학생 간의 취업에 긴장 국면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월 사이에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는 1,024만 명, 도시 실업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자는 432만 명,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는 135만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제3분기 도시 등록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4.1%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청서에 따르면, 취업 증가는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2012년 1~8월 사이에 동부의 11개 성시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2011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였지만, 중부와 서부의 증가폭은 2011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다. 그중 중부의 신규 취업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다. 서부 신규 취업자 증가 폭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농민공의 취업 형세가 호조를 띠면서, 경제성장 속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민공들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전국 100여 개 도시 노동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2012년 제3분기 외래 근로자의 구직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주로 중서부 지역의 투자 증가와 이로 인한 외출 농촌 노동력의 고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청서는 대졸자 취업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회 여론의 반응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학생 취업시스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고, 적지 않은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구직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100여 개 도시 노동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2년 제3분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올해 대졸 구직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편이다. 이른바 새롭게 등장한 실업 청년 중에서 당해연도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지만, 2011년 제3분기의 비율이 4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볼 때, 실제 대졸 구직자의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1%가 증가한 셈이다.

사회청서에서는 고용구조의 지속적인 조정을 지적했다. 업종별 취업형세에서 볼 때, 제조업 고용수요가 낮아지고 있지만,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수요는 상승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만 1,000여 개 기업의 채용 현황을 조사했는데, 7월 말과 전년도 연말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가 1.35% 감소하였지만, 정보 전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4.65%가 성장했고, 숙박 음식업도 3% 성장했으며, 주민서비스와 다른 사업 서비스업 일자리가 1.48%가 성장했다.

• 출처: 中国新闻网, 2012년 12월 18일자, '社科院报告称农民工和大学生就业未现紧张局面'